

사참위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시중 유통…환경부 방치”

가습기살균제 판매, 환경과학원 승인 필요 사참위 직접 구매해보니, 승인 없이 판매 “환경부 안전실태 조사하고도 적발 못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중 하나였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환경부의 방치 속에 최근까지 시중에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1월25일 온라인 쇼핑을 통해 6종의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을 구매했다

고 밝혔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2종, 가습기용 아로마방향제 1종이다. 현행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참위가 최근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들은 이같은 승인 없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사참위는 설명했다. 사참위는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 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며 “구매한 6종 제품은 해당 조사 기간 동안에도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경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 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검사 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관광객으로 혼잡한 제주공항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발길로 제주국제공항이 붐비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늘어난 73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105일 만에 최다다.

‘학생 성희롱·뽀뽀’ 중학교 교사, 2심도 해임 정당

항소심 법원도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2행정부(재판장 강문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원의 책무, 징계 양정 기준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

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 뒤 2019년 5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특별징계위는 2019년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교원 소청위에도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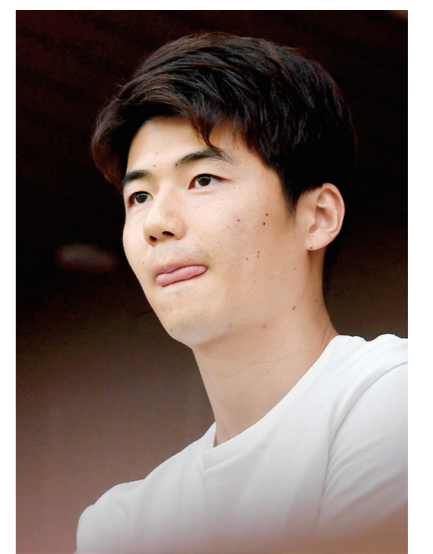
검찰은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록 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일부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안팎 투기 의혹…경찰수사

기영옥 전 광주FC단장과 영농 의사 없이 수십억원대 논·밭 매입 무단 형질 변경과 토지보상금 챙긴 의혹도 농지법 위반 등 혐의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이 아버지와 함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할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수십억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면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던 점,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닌지 들여



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기 전 광주FC 단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민정기자

“밤 까, 내집 쓰레기 치워”…갑질 공무원 2심도 강등 정당

나이·직위 불문 반말에 공용차 사적 사용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 고법판사)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도 군청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각 징계 사유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미뤄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2018년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군청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직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사적 부분까지 세세히 묻고, 이 과정에 불합리한 언사를 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일부 직원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있다. 또 나이·직위 불문 반말, 청소 업무 공무직 직원에게 밤 까기와 생강 씻어 말리고 편 썰기 등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는 자신의 해외여행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도록 한 사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오게 한 일도 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